

■ **법률연맹, “제21대 국회에 바란다” 서울지역 대학생 법·정치의식 설문조사**
 <<이 설문조사는 청년 대학생들 생각을 모은, 어떤 정치성도 없는 순정한 자료이니, 집권당/청/내각과 사법부/언론의 활용 희망>>

■ **“자유” 를 삭제하는 개헌만큼은 막아야 한다 <82.60%>**

■ **“유권무죄 무권유죄” 현상은 여전히 여전하다 <85.25%>**

■ **“주한 미군 철수” 하면 우리국방이 걱정된다 <74.77%>**

■ 공수처 설치하면 고위 공직자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 <24.04%>

■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<65.07%> // 북한이 남한을,<02.92%>

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강제수사보다, 관계기관 수사 등 기타 방안 <71.98%>

■ 거대여당 여대야소 국회라서, 야당무시 독재가 우려된다 - 61.09%

■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공무원 증원에 동의 한다 - 08.37%

■ 10억을 준다면 1년간 교소도 생활을 할 수 있다 - 44.62%

■ 국회는 국민(청년/대학생)의 삶에 영향을 준다 - 90.04%

■ 대북 경제지원 확대해야 한다, 예 - 23.77% // 아니오 - 75.30%

■ 저작권법을 세계표준인 친고죄로 재개정해야 - 36.79%

■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.(비용 크면 늦어질 수도) - 80.74%

I. 조사배경 · 개요

1. 입법/사법감시, 법률전문 NGO/NPO인 29년 전통 **법률소비자연맹/한국대학생 봉사단**(총재 **김대인**)에서는 매년 법의 날을 기해 청년 대학생 법정치 설문조사를 해 왔던 바, 금번 코로나19로 연기하던 중, 제21대 국회출범에 즈음하여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이대, 카이스트 등 **전국 20여개 대학교의 청년·대학생**의 제21대 국회전망, 개헌, 통일 및 대북정책, 법·정치의식, 사법개혁, 현안 이슈 등에 대한 견해/입장을 조사하였다.

대면조사 방식으로 전체 753명《지난4년 평균 3천8백명》의 **대학생 및 대학원생**을 대상으로, 2020년 6월 8일(월)부터 6월 17일(수)까지 10일 동안 34개 문항의

설문으로 조사를 하였다.

- 1) 조사기관 : 법률소비자연맹/한국대학생<법정치>봉사단 (총재 김대인)
- 2) 조사방법 : 34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<제한된 대면조사로 예년의 1/5>
- 3) 조사대상 : 남녀 청년·대학(원)생 753명

<표본오차는 95%신뢰수준에 $\pm 3.57\%P$ >

가) 성별 응답자 현황

구분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남 (청년·대학생)	280	37.18%
여 (청년·대학생)	473	62.82%
계	753	100.00%

나) 학력별 응답자 현황

구분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① 재학	486	64.80%
② 휴학	93	12.40%
③ 졸업	131	17.40%
④ 대학원 재학	28	3.72%
⑤ 기타	12	
무응답	3	
계	753	100.00%

다) 응답자 평균연령 : 23.73세 <24세>

2. 이하 12쪽까지 목차 - 주요 응답개관

- 1) 제21대 국회에 대한 전망/기대 :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, 7개 항목(3쪽)
- 2)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: 비판적 태도 많아, 5개 항목(4쪽)
- 3) 법과 사법, 시사에 견해 : 사법 불신이 높아, 11개 항목(4쪽)
- 4)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: 표현의 자유, 권력분립 중요, 2개 항목(6쪽)

3.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연맹/한국대학생<법정치>봉사단 총재는 “제21대 국회는 여대 야소의 국회인 만큼 국회가 ‘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말’은 사라질 것이지만, ‘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’는 액튼경(Lord Acton)의 말이 시사하듯 민주주의 핵심인 권력견제(Check & Balance) 사라진 정부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여야 협치와 상호견제기능이 충실해져야 한다”고 하면서,

“실질적인 법치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(정치)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,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바, 더욱 우리의 사법(수사·재판)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, 무오류의 성역처럼 국민 위에 군림해 왔는 바, 제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및 국가개혁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”고 역설했다.

붙임 - 주요 항목 분석(3쪽) 및 항목별 응답 현황 (6쪽)

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 (www.goodlaw.org) 공지사항 참조. 끝.

법률연맹총본부-한국대학생봉사단

전화. 02) 523-8760~7 goodlaw@goodlaw.org <문의 : 홍금애 실장 / 윤소라 부장>

Ⅱ. 주요 항목 분석

1. 제21대 국회에 대한 전망 :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

1) 제21대 국회의 출범과 관련해 ‘국회가 자신(국민)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’는 의견이 90.04%(많은 영향을 미친다 41.83% 포함)이었고, ‘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’는 의견은 9.30%에 불과해, 청년 대학생들도 국회의 역할을 크게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) ‘제21대 국회는 이전 국회보다 좋아질 것이다.’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응답이 53.92%로, 동의한다는 응답(45.02%)보다 높게 나타나. 제21대 국회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.

3) ‘제21대 국회는 초선이 많아 구태가 사라질 것이다’에 대해서도 부동의한다는 응답은 73.31%로 높은 반면, 동의한다는 응답은 겨우 26.03%에 불과했다.

4-1) 거대여당의 ‘여대야소 국회라서 야당 무시 독재가 우려 된다’는데 동의하는 의견은 61.09%로 부동의한다는 의견(38.11%)보다 거의 두배 정도 많았다.

4-2) 6월 5일 국회의 반쪽 개원에 대해서는 ‘53년의 관행을 깨고,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다’는 응답이 43.82%였고, ‘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거대 여당의 독주다’라는 응답이 41.88%로,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.

5) 제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일에 대해서 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’는 응답이 42.36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정부를 법대로 감시 견제해야 한다’는 응답이 21.91%, ‘자유헌법을 수호해야 한다’는 응답이 18.99%, 그리고 ‘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’ 한다는 응답이 12.08% 순이었다.

6) “제21대 국회는 ‘자유’를 삭제하는 개헌을 막아야 한다”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2.60%로 매우 높아,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실상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려는 기류에 우려하는 의견이 높았다.

7) 논란이 된 위안부 할머니 관련 정의연(윤미향)사태에 대해 ‘당사자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’는 의견이 51.0%였고, ‘검찰조사를 지켜 보아야 한다’는 의견은 44.22%였다.

2.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: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·회의적 태도

1) 정부가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봉쇄요구에 즉각 ‘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’고 응한 것에 대해 51.93%가 ‘굴욕적으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’고 해 응답한 반면 ‘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’라는 응답은 겨우 35.99%에 불과했다.

2) ‘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’는 데에 동의하는 의견은 28.42%인데 비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은 69.99%로 높게 나와 현 정부 대북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.

3) ‘주한미군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’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24.77%인 반면,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74.77%로 높았다.

4) 대북경제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75.30%가 부정적(부동의)이었으며, 국내에 있는 탈북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46.48%가 부정적(부동의)이었다.

5)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듯 남북통일과 관련해 ‘통일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한다’는 의견은 15.41%인 반면, ‘비용이 많이 들면 통일은 늦어질 수 있다’는 의견이 42.76%였고, ‘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’는 응답도 37.98%로 높게 나왔다. 통일의 적합한 형태에 대해서는 ‘남한의 북한 흡수통일’이 65.07%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.

3. 법과 사법, 시사(時事)에 관하여 : 사법불신은 높고, 준법의식은 혼돈/회의

1)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라는 말에 대해 ‘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’는 의견이 85.26%로 여전히 높게 나왔으며, ‘동의하지 않는다’는 겨우 14.08%에 지나지 않았다.

2) 준법의식과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는 ‘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’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6.92%인 반면, 부동의하는 응답은 32.67%였다.

3) ‘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’에 동의하는 의견은 48.87%였고, 부동의 하는 의견은 50.96%였다.

4) ‘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’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46.35%이었고, 50.99%는 부동의하였다.

5) ‘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’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4.62%였고, 부동의 한다는 응답은 55.11%였다.

6)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신설에 따라 ‘고위공직자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’라는 응답은 24.04%인 반면, ‘대통령 등 공수처 인사권자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.’라는 응답이 49.26%로,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. 참고로 ‘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킬 것이다’는 응답은 20.45%였다.

7)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‘수사권 남용으로 당사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 질 것이다’라는 의견이 53.63%로 높게 나왔으며, ‘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해 인권침해가 사라질 것이다.’라는 응답은 39.31%에 불과했다.

8) 비친고죄로 개정된 이후 저작권법 악용 로펌들이 합의금을 중용하거나, 협박하는(소위 법파라치) 것에 대해서는 ‘저작권법은 세계표준인 친고죄로 재개정해야 한다’는 의견이 39.31%로 높게 나와, 제21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입법과제의 하나로 나타났다.

9)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등 코로나19 국가위기 시기에 기업의 혹 수사에 대해서는 ‘의혹수사는 필요하지만, 완급조절이 필요하다’는 의견이 56.44%로 높게 나왔고, 반면, 강제수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에 한다는 의견은 27.21%에 그쳤다.

10)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대책으로 세금인상이 예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 ‘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인상이 필수적이다’는 응답은 32.67%인 반면, ‘세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’는 응답은 50.73%로 대체로 세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다.

11)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 ‘사기업의 정규직 확대’라는 응답이 43.29%로 가장 많이 나왔고, ‘창업 확대 등 새로운 직업군 발굴’이라는 응답이 30.41%로 다음이었으며, ‘공무원 증원’ 응답은 08.37%에 불과했다.

4.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/이해 : 표현의 자유, 삼권분립 중요

1) 자유(민주)주의와 사회(민주)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언론출판 집회 등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여부라는 응답이 55.38%로 가장 높았다. 그 다음으로 선거제도 유무가 28.02%였다.

2)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3권분립(견제와 균형)이라는 의견이 48.21%로 국민자치(34.0%)보다 높게 나왔다.

III. 항목별 응답현황 |

1. 제21대 국회에 대한 전망과 과제

■ 귀하는 21대 국회에서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자유헌법을 수호해야	143	18.99%
☐ 2. 경제를 활성화해야	319	42.36%
☐ 3. 정부를 법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	165	21.91%
☐ 4.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	91	12.08%
☐ 5. 기타	35	4.65%

■ 귀하는 국회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많은 영향을 준다.	315	41.83%
☐ 2. 조금은 영향을 준다.	363	48.21%
☐ 3.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.	70	9.30%
☐ 4. 기타	5	0.66%

■ 귀하는 제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다음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로 응답바람)

▶ 제21대 국회는 ‘자유’를 삭제하는 개헌을 막아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622	82.60%
☐ 2. 아니오	125	16.60%
무응답	6	

▶ 여대야소 국회라서 야당무시 독재가 우려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460	61.09%
☐ 2. 아니오	287	38.11%
무응답	6	

▶ 제21대국회는 최저임금정책을 철회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196	26.03%
☐ 2.아니오	552	73.31%
무응답	5	

▶ 제21대 국회는 초선이 많아 구태가 사라질 것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195	25.90%
☐ 2. 아니오	551	73.17%
무응답	7	

▶ 제21대 국회는 이전 국회보다 좋아 질 것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339	45.02%
☐ 2. 아니오	406	53.92%
무응답	8	

■ 귀하는 이번 실시한 ‘연동형 비례대표제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성공한 제도이므로 지속되어야한다.	65	8.63%
☐ 2. 실패한 제도이므로 없애야한다.	205	27.22%
☐ 3. 비례대표선거는 몇 번 더 실시해보고 평가해야 한다.	439	58.30%
☐ 4. 기타	42	5.58%
무응답	2	

■ 귀하는 소위 위안부할머니 관련 정의연(윤미향)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당사자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.	384	51.00%
☐ 2. 검찰조사를 지켜보아야 한다.	333	44.22%
☐ 3. 기타	35	4.65%
무응답	1	

■ 귀하는 6월 5일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제21대 국회 반쪽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5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거대여당의 독주다.	315	41.83%
☐ 2. 53년의 관행을 깨고, 법정시한을 잘 지킨 것이다.	330	43.82%
☐ 3. 기타	100	13.28%
무응답	8	

■ 귀하는 국회의 인사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 등의 임명을 할 수 있고, 또 임명강행하고 있는 현행 ‘인사청문회 제도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다.	323	42.90%
☐ 2.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게 제도 개선해야 한다.	396	52.59%
☐ 3. 기타	31	4.12%
무응답	3	

2. 남북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

■ 귀하는 남북통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통일은 무조건 최우선 실현되어야한다.	116	15.41%
☐ 2. 비용이 많이 들면 통일은 늦어질 수 있다.	322	42.76%
☐ 3.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.	286	37.98%
☐ 4. 기타	25	3.32%
무응답	4	

■ 귀하는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통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	490	65.07%
☐ 2. 북한의 남한 흡수통일	22	2.92%
☐ 3. 남북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	213	28.29%
☐ 4. 기타	26	3.45%
무응답	2	

■ 귀하는 정부가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봉쇄 요구에 즉각 ‘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’고 응답(?)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굴욕적으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.	391	51.93%
☐ 2.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이다.	271	35.99%
☐ 3. 기타	83	11.02%
무응답	8	

■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)

▶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186	24.70%
☐ 2. 아니오	563	74.77%
무응답	4	

▶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214	28.42%
☐ 2. 아니오	527	69.99%
무응답	12	

▶ 국내에 있는 탈북자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399	52.99%
☐ 2. 아니오	350	46.48%
무응답	4	

▶ 대북 경제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179	23.77%
☐ 2. 아니오	567	75.30%
무응답	7	

▶ 탈북민의 국회진출이 남북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214	28.42%
☐ 2. 아니오	524	69.59%
무응답	15	

3. 법과 정치, 시사문제에 대한 입장

■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(有權無罪 無權有罪 : 권력실세는 죄가 없고,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)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 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.	642	85.26%
☐ 2.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 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.	106	14.08%
☐ 3. 기타 / 무응답	5	0.66%

■ 귀하는 언론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.	535	71.05%
☐ 2.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	170	22.58%
☐ 3. 기타	48	6.37%

■ 귀하는 전항의 언론보도가 수사나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수사나 재판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.	139	18.46%
☐ 2. 수사나 재판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.	598	79.42%
☐ 3. 기타	16	2.12%

■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로 응답바람.)

▶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504	66.93%
☐ 2. 아니오	246	32.67%
무응답	3	

▶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368	48.87%
☐ 2. 아니오	383	50.86%
무응답	2	

▶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349	46.35%
☐ 2. 아니오	399	52.99%
무응답	5	

▶ 10억을 준다면, 1년 동안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예	336	44.62%
☐ 2. 아니오	415	55.11%
무응답	2	

■. 귀하는 비친고죄로 개정된 이후 저작권법 악용 로펌들이 합의금을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저작권법은 세계표준인 친고죄로 재개정해야한다.	277	36.79%
☐ 2. 엄격히 단속해 일벌백계해야한다.	352	46.75%
☐ 3.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별문제가없다고 생각한다.	80	10.62%
☐ 4.기타	39	5.18%
무응답	5	

■ 귀하는 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소위 공수처)’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.	181	24.04%
☐ 2.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킬 것이다.	154	20.45%
☐ 3. 대통령 등 공수처 인사권자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.	371	49.27%
☐ 4. 기타	45	5.98%
무응답	2	

■ 귀하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해 인권침해가 사라질 것이다.	296	39.31%
☐ 2. 수사권남용으로 당사자들의 인권침해가 심해질 것이다.	404	53.65%
☐ 3. 기타	49	6.51%
무응답	4	

■ 귀하는 검찰의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등 코로나19 국가위기시기에 기업의혹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강제 수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.	205	27.22%
☐ 2.의혹수사는 필요하지만, 완급조절이 필요하다.	425	56.44%
☐ 3.기업수사보다 담당 관련 정부기관을 수사해야한다.	96	12.75%
☐ 4.기타	21	2.79%
무응답	6	

■ 귀하는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을 비롯해 코로나19 경제위기대책으로 세금인상이 예견되고 있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세금인상이 필수적이다.	246	32.67%
☐ 2. 세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.	382	50.73%
☐ 3. 세금인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.	75	9.96%
☐ 4. 기타	49	6.51%
무응답	1	

■ 귀하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사기업의 정규직 확대	326	43.29%
☐ 2. 공무원 증원	63	8.37%
☐ 3. 단기 알바직 확대	20	2.66%
☐ 4.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	36	4.78%
☐ 5. 창업확대 등 새로운 직업군 발굴	229	30.41%
☐ 6. 해외에 있는 국내기업의 복귀지원으로 일자리 증대	52	6.91%
☐ 7. 기타	26	3.45%
무응답	1	

4.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/인식

■ 귀하는 다음의 예시 중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3권 분립(견제와 균형)	363	48.21%
☐ 2. 입헌(법치)주의	121	16.07%
☐ 3. 국민자치	256	34.00%
☐ 4. 기타	11	1.46%
무응답	2	

■ 귀하는 다음의 예시 중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☐ 1. 선거제도의 유무	211	28.02%
☐ 2. 국민최저생활제도 유무	90	11.95%
☐ 3. 언론·출판·집회 등 표현의 자유의 유무	417	55.38%
☐ 4. 기타	33	4.38%
무응답	2	

〈끝〉